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 대안은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대법 재부상 따라 필수의료 강화 기대감
전북자치도,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한 협의 지속

전북의 오랜 현안인 공공의대법이 수면 위로 다시금 부상하면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다.

이는 의료취약지 해소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필요성과도 맞물린다.

전북자치도는 2018년 폐교된 서남대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현안 사업으로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해 당위성을 높여가고 있다.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 폐교된 서남대의대 정원을 활용해 연간 49명

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이 무산되고 22대 국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정 갈등 장기화로 사실상 법안 심사가 중단됐다. 다행이도 최근 들어서 일각에서 공공의대법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자치도에서는 21대 조기 대선 진행에 맞춰 전북의 숙원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근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면서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며, 오는 25일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박민수 보건복지부제2차관을 직접 만나 공공의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창환 전북자치도 보건의료과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전국 단위로 확충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해법 중 하나”라며,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본 사업은 기존 의대 정원 확대와도 무관하며, 현행 법령과 제도 범위 안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23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뜻뜻한 슬로건 아래,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김관영 도지사가 행사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행복을 바라봄... 희망을 이어봄...’

전주 화산체육관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 등 1300여명 참여... 복지 실현 의지 다져

장애인의 날 기념식 조직위원회는 23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라는 뜻뜻한 슬로건 아래,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라엘(대표 김기중)이 주관했으며, 김관영 도지사, 서거석 도교육감, 도의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등 총 1,300여명이 참여해 장애인의 날 의미를 함께 나눴다.

식전에는 매직쇼와 난타 공연이 분위기를 띄웠고, 본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과 함께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52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오후에는 장애인 참가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재능을 선보이는 장기자랑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전 직원들이 무대에 올라 선보인 수어공연이 큰 감동을 주며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다양한 복지 전시·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체험(도립장애인복지관, 전북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보조기기 전시·점검(장애인보조기기센터) △장애인생산물 전시·판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홍보(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홍보(장애인인권연대) △전북인 복지 플랫폼 사업(사회서비스원) 홍보 등으로 참여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등록 장애인 수가 총 12만8,49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7.4%에 이르며, 전남(7.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비율

로, 도내 장애인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총 114개 장애인 복지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92억원이 증액된 총 3,349억원의 규모로 도 전체 예산의 3.8%에 해당한다.

특히, 도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장애 아동돌봄비 차우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기중 (사)라엘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장애인이 가진 재능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슬로건처럼 도민 모두가 ‘행복을 바라보고, 일상을 담으며, 희망을 이어가는’ 그런 봄날을 맞을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농어촌 기본주택 도입, 농어촌 기본사회 실현”

김슬지 도의원, “尹정부 시기 공공주택 정책 마비... 전북형 개선과제 도출해야”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세 탈피 · 주택 공급방식 다양화 등 방안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비례)이 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형 농어촌 기본사회의 실현을 위한 ‘농어촌 기본주택’의 도입을 제안했다.

농어촌 기본주택이란 임대아파트 등 공공주택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민간 공급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주택을 포괄하는 것으로, 주거의 사회적 권리 보장과 공공의 책임성 강화를 핵심 골자로 한다. 최근엔 전북자치도가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농촌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로도 논의되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는 공공형 주택 사업을 비롯한 주거복지 정책을 무력화했다는 것”이라며, “일례로 주택도시보증금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34%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연평균 20%의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방정부 또한 공공주택 보급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는데, 전북자치도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기 공공주택의 착공과 입주와 활발히 이루어진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며,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이마저도 대부분 전주·익산·군산 등 대도시에 집중돼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만 이러한 현상은 전북의 무사안일식 단조로운 도정에도 적지 않은 원인이 있기에 새정부를 맞아 주

거 정책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며,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세 탈피 △토지임대부사회주택·노후 주택 리모델링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양화 등 농어촌 기본주택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전북의 농어촌은 주택 가격 측면에서 타 지역 대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에, 농어촌 기본주택은 지방의 생존경쟁 시대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간 멈추었던 공공주택 정책을 다시 화생하는 것을 넘어 주택을 책임진다는 과격적인 각오로 관련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http://council.jinan.go.kr

군민과 함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진안군의회

제9대 진안군의회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